‘요코하마 식’ 보육시설 대기아동 해소 정책

ㅇ 2013년 4월 1일 보육시설 대기아동 제로를 달성한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아베 총리는 일본 전국으로 확산하려 하고 있음

ㅇ 요코하마시의 보육시설 대기제로 선언은 매우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지만,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아 여성의 사회 진출 촉진을 위해서는 행정기관과 민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

□ 보육시설의 대기아동 증가는 심각한 사회문제

ㅇ 2010년부터 3년 내에 대기아동을 제로로 하는 목표를 내세웠던 요코하마시장은 2013년 5월에 목표를 달성했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

- 요코하마시와 대조적으로 도쿄도는 대기아동의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, 정원 6~19명의 소규모 보육시설의 증설 대책을 추진하고는 있지만, 잠재적인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

ㅇ 일본에서는 ’08년 리먼 사태 이후 경제 환경이 급변하면서 맞벌이 부부가 증가

-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싶은 가정이 늘어나면서 인가받은 보육시설에 결원이 없어 대기아동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

- 일본 후생성에 따르면 정원 초과 등의 이유로 2012년 일본 전국에 대기 중인 아동은 약 4만 6000명으로 추계

- 보육시설에 대기 등록을 포기한 '잠재 대기아동'의 추계는 약 85만명으로 대기아동 문제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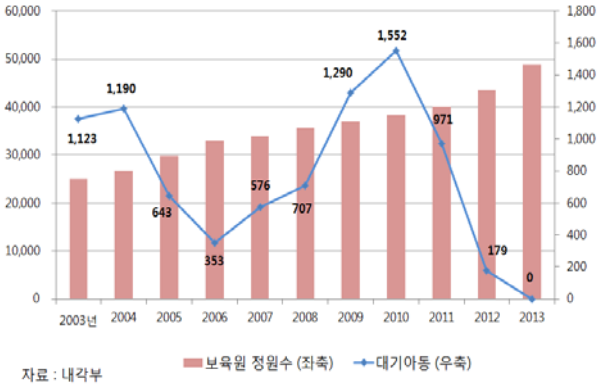
□ 요코하마시에서 '대기아동 제로' 정책 추진

○ 요코하마시는 '10년 대기아동이 1,552명으로 전국 도시 중에서 가장 많았으나, '13년 4월 1일 '대기아동 제로' 목표를 달성

- 하야시 후미코 시장은 "민간 기업과 행정이 연계하였기 때문에 목표 달성이 가능" 했다고 평가

  * 요코하마시는 '13년도 일반회계예산에 887억엔(작년대비 6% 증가)을 대기아동 대책 및 보육원 운영관련비용으로 계상

< 요코하마시의 대기아동 추이 >



자료 : 내각부

1 보육시설 증설, 민간 기업의 참여 추진

- 보육시설 정비를 희망하는 지역을 '긴급정비지역'으로 지정하고 보조금을 1.5배 증액

- 유휴 공유지나 철교 아래 유휴지 등을 활용하여 보육시설 부지를 확보하였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토지를 매칭

- 2010~2012년 인가받은 보육시설은 144개 증가하였으며, 기업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은 '10년 대비 2배 이상 늘어나, 전체예산의 25%를 차지

  * 도시바, JFE엔지니어링, 닛산 등이 회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등 독자적인 노력도 기여

2 인가받지 않은 시설인 '요코하마 보육실'을 활용

- 대기아동은 대부분 3살 미만이 차지하고 있어, 요코하마시 자체 기준을 충족시킨 요코하마 보육실을 증설하고, NPO법인 등을 활용한 가정보육도 정비

- 요코하마 보육실은 가정의 소득에 따라 1~5만엔 정도의 보육료를 삭감 지급

* 요코하마 보육실 '13년 156개('12년 124개), 가정 보육원 '13년 36개('12년 0개)

3 전문 상담원을 '보육 컨시어지(concierge)'로 배치

- 일본 최초로 '보육 컨시어지' 제도를 도입, 구청을 중심으로 지역의 상황에 맞게 차별적으로 대응

- 개별 니즈에 맞는 보육원 및 보육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도우미를 요코하마 18구에 21명 배치, 부모들의 니즈에 따라 개인이나 민간이 운영하는 무인가 보육원도 소개

- 모든 구청에서 대기아동 대책을 중점 정책으로 인식하고 세밀하게 대응, 긴급보육대책과 담당팀장을 각 구청에 1명씩 총18명 배치

○ 가와사키시에서도 민간 기업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확충시키는 등 다른 시에서도 대기아동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이 강화

- 치바현 나가레야마시에서는 보호자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들을 전철역에서 맡기면 버스로 보육원까지 데려다 주는 '보육 스테이션' 서비스가 인기

- 전철역에 인접한 '보육 스테이션'에서 어린이들을 모아 버스로 각 보육시설로 데려다 주고, 어린이들은 저녁 5시에 다시 버스를 타고 '보육 스테이션'에 돌아와서 보호자를 기다리는 시스템

- '보육 스테이션'에서는 보육사가 저녁 9시까지 어린이를 돌보기 때문에 야근하는 보호자도 안심할 수 있으며, 인근 보육시설에 자리가 없는 경우, 먼 보육시설에 보내야 하는 보호자들의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음

○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의 일환으로 '여성의 경제 활동'을 촉진시키기 위해 요코하마시의 '대기아동 제로' 정책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음

- 향후 5년 내에 보육시설의 정원을 40만명 증가시켜, 대기아동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'대기아동 해소 가속화 플랜'을 발표

□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

○ 보호자 입장에서는 민간 보육시설보다 비용 부담이 적은 인가보육시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,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는 가정도 증가하고 있어 구청 단위가 아닌 지역전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도 산적

- 요코하마시도 국가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대기아동이 제로이지만, 한시적인 보육 서비스 이용자나 보호자가 육아 휴직 상태로 보육시설에 들어가지 못한 어린이도 있기 때문에 대기아동을 새롭게 정의할 필요

○ 급속한 보육시설의 정원 확대는 보육사 부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며 보육의 질의 저하나 재정 부담의 증가 가능성도 지적

- 제일생명경제연구소는 힘든 노동환경 때문에 장기간 근무하는 보육사가 많지 않아, 보육사가 2017년도에는 약 7만 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정

○ 저출산이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수용 중인 어린이들이 졸업한 후에도 신설된 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

- 경영 악화로 인한 폐업 리스크를 우려하여 요코하마시를 제외한 다른 지자체에서는 민간 기업 참여가 아직 소극적
- 복지법인은 공적자금으로 시설을 건립할 수 있으나, 약 2억엔이 소요되는 민간 기업은 경제적 부담이 상당

□ 시사점

○ 대기아동 해소 문제는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인식하여 시와 민간 기업이 일체가 되어 협력을 추진할 필요

- 특히 대기아동 문제 해소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해서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
- 우리나라도 직장 여성을 위한 '육아 해우소'의 설치, 어린이집 대기 순번 공개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용자의 니즈를 세밀하게 반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요코하마시의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

○ '대기아동 해소' 문제는 여성의 사회참여, 창업, 고용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환경 개선이 필요하며, 문제해결 과정에서 기업들에게도 사업 참여 기회가 있을 가능성

<참고 자료>

닛케이신문(2013.5.13/20/21), 마이니치신문(2013.5.18./21), 내각부 "제2회 저출산 위기 돌파 타스크포스 회의자료" (2013.4.16)